

포용국가와 다문화가정 영유아 지원

차운경 한양대학교 교수

다문화는 세계적 추세이다. 급속히 진행되는 경제, 사회문화적 지구화와 교통 및 통신 수단의 비약적 발달로 인한 이른바 ‘초연결 사회’의 도래는 전 세계를 단일 삶의 무대로 변화시키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국경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지구 차원의 인적 및 물적 유동성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단위 국가의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자신이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는 약 2억 5천 8백만 명에 달한다. OECD 국가에만 전체 인구의 약 10 퍼센트에 달하는 1억 2천 8백만 명의 이민자가 살고 있으며, 이들의 자녀를 포함한 이민배경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7 퍼센트에 달한다. EU 회원국 역시 전체 인구의 약 18 퍼센트에 해당하는 이민배경 인구를 갖고 있다. 유럽에서 대표적인 단일민족 국가로 간주되던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전체 인구의 약 4분의 1이 이민배경을 갖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2019년 12월 현재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약 252만 4천여 명으로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4.9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한 언론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인용하여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2030년까지 약 920만 명, 2060년까지 약 1,5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UN에서도 한국이 인구부족 현상으로 2050년까지 약 1,2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이는 한국 전체인구의 5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예측한 바 있다. 또한,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2017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는 약 21만 2천여 명에 달하며, 매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의 수는 전체의 약 5 퍼센트를 상회한다. 이와 같은 추세를 감안한다면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화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것처럼 보인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인종, 언어, 및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해온 한국 사회의 경우 이와 같은 사회 전반의 다인종 다문화화는 미래 세대의 보육과 교육에도 심각한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정부 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한국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결혼이민자들의 정착과 그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사회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로드맵의 부재로 인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영유아 시기부터 선주민 자녀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 및 교육 관련 보고서와 연구들에 의하면 다문화가정의 영유아들의 경우 돌봄 관련 선호 시설 및 사람의 종류가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공적 돌봄 기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선주민 자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또한, 대다수의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편이며 이들이 지출하는 평균 돌봄 비용은 선주민 자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일수록 아이들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비율이 낮고 양육수당에 의존하거나 가정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처해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은 향후 이들이 빈곤과 저 교육수준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들 가능성을 높이며, 나아가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장기적 균형발전과 통합에도 심각한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현 정부의 국정 방향인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근원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는 국민 모두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기회와 권리를 지닐 때 한국 사회가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혁신적 포용국가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고 포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한 기회, 기본적인 권리,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보장하며, 각자 자신의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확장하는 국가”를 지향한다. 이는 또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이며, 따라서 그 누구도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불가양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한 유엔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문화가정 영유아를 위한 지원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명하다. 무엇보다 시급한 사항은 다문화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립하는 일이다. 물론 다문화 한국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사회적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인종 다문화화가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민족이나 인종, 종교, 언어, 계층 등 여러 차원에서 급속히 증대되는 문화 및 정체성의 다양성을 공격적으로 인정하고 통합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배려, 협력과 공존의 사회문화적 풍토와 제도를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다문화 한국사회의 미래 비전과 일관성 있게 부합되는 법과 제도를 구비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일 역시 시급하다. 특히, 현재 각종 정부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이나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정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모든 아동들의 출생사실과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문화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는 일이기도 하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민족화”를 위한 동화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문화적 본질주의 함정이나 역차별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결핍모델의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근대 사회모델에서 개인은 사회의 핵심 구성 인자임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사회 영역에서의 공공 활동의 궁극적 기반으로 간주되어 왔다. 다문화가정 영유아들을 포함한 한국 사회의 모든 아동들이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따라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인종, 언어, 종교, 계층, 성, 장애 등의 다양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상호보완적 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따라서 미래세대의 양육과 교육은 이질적인 문화요소와 다양한 형태의 차이를 개방적인 자세로 수용하고 조화시켜 이를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를 위한 풍부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수용능력과 성숙된 시민의식 배양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개인이 외형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시민임과 동시에 하나의 지구를 삶의 터전으로 공유하고 있는 세계시민이라는 인식과 정체감을 가질 수 있을 때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다문화 한국사회의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